

수출입차를 보여주는 무역수지는 952억2천만 달러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늘어 2016년 대비 59억8천만 달러 증가했다. 대중국·미국·아세안 등은 무역수지 흑자, 대일본·EU 등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 2017년 수출입 평가

수출단가가 크게 증가했고 수출물량도 확대돼 수출은 15.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IT 호황에 따른 반도체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가영향 품목(석유제품·석유화학)이 단가 상승을 주도했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물량도 증가했다.

유가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 경기 요인이 개선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 호황기를 맞아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고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수출 증가율도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수출 순위가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기업용 메모리 및 완제품 수요가 늘었고 MCP, SSD, OLED 등 고부가 품목이 모두 30%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 유망소비재 수출도 13.1% 증가해 수출 다변화가 진전됐다.

■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 적자는 344억7천만 달러로 167억5천만 달러 늘었다. 지재권사용료수지는 적자폭 감소, 여행·운송수지는 적자폭이 증가했고 건설수지는 흑자폭이 축소돼 전체적으로는 적자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행수지는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72억6천만 달러 확대돼 171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설수지는 저유가로 인해 2015~2016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수주가 각각 -30.1%, -38.9% 감소하며 흑자폭이 77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18억5천만 달러 축소됐다.

운송수지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선단수 축소 등으로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2016년 대비 적자가 37억5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또 가공서비스수지는 67억6천만 달러 적자를 내 적자폭이 10억 달러로 늘어났다.

지재권수지의 경우 휴대폰, 가전 등 해외생산이 확대돼 2013년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은 21억2천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적자폭이 7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 지급 확대 등으로 투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2017년 9억8천만 달러, 2016년 대비 34억4천만 달러 감소)하면서 2016년보다 37억3천만 달러 축소된 1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이전소득수입이 94억4천만 달러 증가(2016

년 대비 7억 달러 증가)했으나 이전소득지급이 165억2천만 달러까지 더 크게 확대(2016년 대비 20억1천만 달러)되면서 2016년보다 적자폭이 13억1천억 달러 늘어난 70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자본·금융계정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871억 달러 늘었다. 기타투자수지는 185억2천만 달러로 순자산 규모가 증가한 반면 직접투자수지는 146억2천만 달러, 증권투자수지는 578억5천만 달러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32억4천만 달러, 91억2천만 달러 줄었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2016~2017년 연속 순자산 감소(2016년: -52억3천만 달러, 2017년: -48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2016년 3천711억 달러에서 2017년 3천893억 달러로 182억 달러 증가했다.

국제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6		2017				
	연간	4/4	1/4	2/4	3/4	4/4	연간
경상수지	992.4	226.8	192.0	164.5	255.7	172.4	784.6
상품수지	1,189.0	273.3	273.1	295.6	347.5	282.7	1,198.5
서비스수지	-177.4	-43.3	-86.6	-67.5	-85.0	-105.6	-344.7
본원소득수지	38.5	8.6	13.7	-48.8	19.5	16.8	1.2
이전소득수지	-57.7	-11.9	-8.2	-14.8	-26.3	-21.5	-70.8
자본·금융계정	1,025.7	249.3	197.4	130.4	308.4	234.7	871.0
직접투자수지	178.6	58.0	68.8	34.8	44.3	-1.6	146.2
증권투자수지	669.7	203.3	80.1	115.2	239.7	143.5	578.5
파생상품수지	-34.4	-11.8	-29.5	-20.7	-3.5	-28.8	-82.5
기타투자수지	135.6	-10.9	70.6	-1.0	29.5	86.1	185.2
준비자산증감	76.2	10.7	7.4	2.1	-1.5	35.6	43.6

주: 한국은행

재정

■ 재정 운용 여건

2017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고 하반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청년 고용 여건은 악화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교역량 증가 및 유가 회복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및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한 상황도 이어졌다.

경기가 회복되며 국제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법인의 실적개선으로 법인세 세수가 크게 증가했고, 수입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초과 달성도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7월 1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을 발표했다.

■ 세입 규모

2017년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414조3천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는 242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26조4천억원이었다.

5월 기준 국세 수입액은 123조8천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1%로 2016년 5월 기준 50.6% 대비 소폭 웃돌며 양호한 수입 상황을 보였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총수입 진도율도 47.3%로 원활했다. 추경 기준 총수입은 423조1천억원으로 국세수입 251조1천억원, 세외수입 26조4천억원이었다.

2017년 세입·세출 마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추경 세입예산 대비 14조3천억원, 2016년 대비 22조8천억원 증가한 26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법인실적 개선과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예정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 지출 규모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 기준 2017년 총지출 규모는 400조5천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386조4천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2017~2021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로 계획하면서 기존 2016~202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발표한 연평균 3.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및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7월 22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약 1천500억원 줄어든 규모였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2017년 총지출 규모는 410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추경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도 약 1만5천 명 늘렸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도 확충했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강화했다. 중소기업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도 추진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도 2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원하고,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생계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애초 본예산상의 2017년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13조7천억원 흑자(GDP 대비 0.8%), 관리재정수지는 28조3천억원 적자(GDP 대비 -1.7%)로 전망됐다. 추경예산 기

준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8조9천억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소폭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로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장래 연금 지급에 대비해 현재 적립 단계에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운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2017년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애초 682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40.4%로 전망됐다. 추경 기준으로는 669조9천억원 증가했으나, 경상 GDP 증가율이 오르면서 GDP 대비 비율은 39.7%로 하향 조정됐다. 최종적으로 2016년 국가채무 결산 감소분 1조2천억원과 2016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분 1조2천억원 등을 반영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결산기준으로 38.6%를 기록했다.

결산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GDP 대비 0.4%) 흑자를,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1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예상보다 대폭 개선됐다.

2017년 재정총량 지표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16년(A)	2017년		증 감(B-A)	
		본예산	추경(B)		%
총 지출	384.9	400.5	410.1	25.2	6.6
총 수입	401.8	414.3	423.1	21.3	5.3
통합재정수지	16.9	13.7	13.0	-3.9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22.7	-28.3	-28.9	-6.2	
(GDP대비, %)	-1.4	-1.7	-1.7	0.3%p	
국가채무	626.9	682.4	669.9	43.0	
(GDP대비, %)	38.3	40.4	39.7	1.4%p	

* 2016년은 결산기준 수치

■ 향후 재정 운용 방향(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1. 재정 총량

정부는 국가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 시계를 적용해 재정 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2017~2021년 기간 중 정부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개혁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2021년 기간 중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의 재정 지출 증가율인 3.5%보다 2.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기간 중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대비 소폭 개선돼 GDP 대비 1.6% 수준으로, 2019년부터는 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2.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부터 소폭으로 상승해 2021년에는 4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건실한 우리 경제 상황과 해외 주요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높은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2. 중기 자원 배분 기본방향

중기 자원 배분은 ①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추진 ②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분야에 집중 투자 ③국가안보·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등 재정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적극적 확장 재정 추진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등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성장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SOC분야에서도 시설투자는 축소하면서 생활밀착형 안전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보·안전분야에서는 사병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및 해경·소방의 현장대응 능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 사람 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혁, 재정 민주화 및 분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추가 재정 요인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년 예산 편성부터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조세지출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수입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일부 사업은 시범 도입 과정을 거쳤으며, 2019년부터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논의·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5~2019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세외수입	26.4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45.6	152.2	155.7	163.6	171.8	4.2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예산지출	274.7	280.3	295.0	313.3	328.1	343.4	5.7
기금지출	125.9	129.8	133.9	140.0	148.5	157.5	5.8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33.0	-38.4	-44.3	
(GDP 대비)	[-1.7]	[-1.7]	[-1.6]	[-1.8]	[-2.0]	[-2.1]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49.1	793.0	835.2	
(GDP 대비)	[40.4]	[39.7]	[39.6]	[39.9]	[40.3]	[40.4]	

조세

■ 2017년 국세 징수 실적

2017년 우리 국민이 낸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65조4천억원으로, 2016년 242조6천억원 대비 22조8천억원(9.4%) 증가했다. 2017년 추경 세입예산 251조1천억원보다도 14조3천억원(5.7%) 증가해 2016년에 이어 초과 세수를 달성했다.

2016년 세수실적 증가는 당해 법인실적 개선과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6년 235조7천억원보다 22조8천억원 증가한 258조5천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2016년 6조8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가한 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9조2천억원으로 2016년 52조1천억원보다 7조1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 법인실적 개선(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16년 63조8천억원에서 2017년 68조4천억원으로 7.2% 증가) 등에 기인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67조1천억원으로 2016년 61조8천억원보다 5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수입증가(수입액이 2016년 4천62억 달러에서 2017년 4천784억 달러로 17.8% 증가)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 및 소비 증가 등이 이유였다.